

새 땅과 현 땅이 갈라진다. 복지국가와 공동의 나라라는 도전 앞에서 : 시대 물결과 정치 능력 간의 간극

이병천 · 홍윤기 _ 공동편집인

뜻의 표징 : 6·2, 서울 G20 그리고 7·28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이미 좀 더 나은 지점에 와 있어야 마땅하다. 올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 그리고 수능날짜도 연기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삶의 자유와 기본권을 아주 심각하게 억압한, 그리하여 이 정부의 역주행 삽질을 온 세계에 과시한 11월의 G20 서울회의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뜻을, 세계도 한국도 크게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긴 장마가 지속되던 지난 여름날에 치러진 7·28 재보궐선거는 변화무쌍한 ‘다이나믹 코리아’ 정치판에서 이런 뜻을 실현할 주체세력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냉엄하게 직시하게 만들었다.

나라 안팎에서 전해진 그 뜻을 안 것은 이 잡지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 우리 편집위원들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들은 말판에 끼는 행보

가 느리다. 하지만 한꺼번에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앞선 말이고 어떤 소리가 뒤진 소리인지는 최소한 분별할 줄 안다. 그렇다면 그 전해진 뜻이란 무엇일까?

6·2 시민선택의 뜻 : 성장과 개발, 경쟁과 대결 위주에서 복지 와 연대, 생태와 평화의 길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는 민선5기 지자체 단체장들과 지역회의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였다. 하지만 이 지방선거는 전국선거처럼 치러졌다. 각 지역의 유권자 시민들은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기분으로 표를 던졌다. 촛불 시위의 경험이 진하게 배여 있다고 할 이 표는 성장, 경쟁, 토건, 승리, 우월을 추구하는 현 집권층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복지, 연대, 생태, 평화, 그리고 공생을 갈구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뜻을 담고 있었다. 바다에서 몰려온 전쟁의 기운은 급격하게 사그러들었고, 강을 파뒀던 헛삼질에 들어가던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였다. 대신 우리 살림살이의 주름이 조금씩 퍼질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듯이 나라가 내 아이 입에 세 끼 중 한 끼라도 먹여준다면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미아버가 들었어야 할 돈이나 시간은 고스란히 더 나은 살림살이를 받쳐주는 것으로 울 터였다. 그 어미아버와 자식들은 그런 나라를 자기 나라,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생각할 것이고, 그 나라다운 나라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기꺼이 다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배세력이 마치 자기네들 고국이나 되는 듯이 송양해 마치 않는 미합중국 최고 학부의 철학 교수로부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날아왔다. 이 제목의 책을 구입한 거의 70만 가까운 독자 대부분이, 대학의 학부생용이기는 하지만 철학전공자들에게도 여전히 쉽지 않은 내용의 이 책을 독파하지는 않았어도, 이 책의 인상 깊은 제목 덕분에

이제 성장, 개발, 성공 심지어 “부자되세요” 대신 ‘정의’라는 말을 거의 역 사상 처음으로 자기의식의 한 관념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공정사회’라는 약간은 생똥맞은 화두는 사실 성장이나 부자되기 대신 그 정반대의 대척점으로서 ‘정의’의 이념이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을 통제 하고 순치시키고자 한 일종의 물타기성 담론 전략이라고 하겠다. 부자에게는 감세 축복, 반대로 서민에게는 잔인한 생존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공정 과 정의를 짓밟는 데 앞장서 온 이 정부가 ‘공정사회’ 운운하는 걸 보면, 확 실히 시대 흐름이 변하긴 변했나 보다.

이제 대한민국이 서 있던 경제의 대지, 사람들의 살림살이에서 성장물신 의 땅이 꺼지면서 복지연대의 토대가 서서히 솟아오르는 지각 변동의 기운 이 분명하다. 정치권도 복지국가로 가는 흐름을, 여전히 서로 다투면서도, 대세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이제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로 가는 한국적 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 기회의 창은 어디에 열려 있는지 진지 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결과가 가리키는 것 :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그로부터 석 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정치, 군사, 경제에 있어 전세계 최대 강국의 정상 20명이 몰려들었다. 적어도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전세 계 모든 나라의 회의기구인 UN조차 능가하는 사실상의 지구경제운영회의 라고 할 수 있는 G20은, 그러나 서울에서, 지구경영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그 무능력을, 그리하여 세계 경제의 혼돈을 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 논쟁으로 시작해서 환율 논쟁으로 끝난 기분이 뚜렷했다. 지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거창하게 제시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비전을 위한 그 어떤 실행계획(action plan)은커녕 어떻게 해서든 위안화의 환율을 절상시키기 위

해 기축통화의 지위를 악용한 미국의 꿈수와 중국의 버티기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위기 관리’, 그리고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안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더군다나 이른바 ‘시장환율결정제’와 ‘경상수지 목표제’같은 방안들이 제출되고 합의됐다고 하는 그 와중에, 놀랍게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무려 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조 7천억 달러의 1차 양적 완화에 이은, 달러를 인위적으로 절하해서라도 미국 수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극약 처방이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 미국은 ‘자유 낙하’(J. Stiglitz) 속도는 약화됐다고 하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만큼 여전히 어두운 위기 터널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의 구세주로 필사적으로 수출에 매달린다. 어떤 수단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나?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달러 약세, 주로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교역 상대국 통화의 강세,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물건을 생산할 자체 능력, 이 세 가지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G20회의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 전쟁으로 끝나 버린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 가지가 큰 난제다. 한 가지 걱정은 미국이 금융 거품의 세계화 오염을 빼고 세계에 팔아먹을 제대로 된 제조업 물건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풍미한 지난 약 30년 동안, 미국이 금융 강국의 길로 일로 매진한 대가이고 달러 강세는 그 핵심적인 정책기둥이었다. 이로 인해 월스트리트는 비대해졌지만, ‘메인 스트리트’를 죽이는 치명적 결과를 자초했다. 금융, 부동산 거품은 높이 쌓여갔고 마침내 2008년 대 위기로 폭발했지만, 분배, 복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력조차 아주 약화됐다. 미국은 너무 늙고 병들어 버렸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세계 자본주의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 눈의 들보는 돌아보지 않고 중국 트집잡기에 연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G20 합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남으로써, 각국이 자기 앞가림에 눈멀어 서로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흔히 ‘근린 국가 궁핍’ 정책이라고 한다)으로 나갈 위험성

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세계 경제는 조절력을 잃고 글로벌 무역 환율전쟁의 혼돈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삼성공화국과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넘어서 : 세계는 넓지 않다. 공정한 경쟁, 생산적 협력,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길로

G20 회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의 대외의존율이 85%를 넘는 우리의 사정에서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도래한 이런 상황조건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계시장이 이제 우리 기대만큼 더 이상 넓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 준다. 우리가 한국경제 97년 체제의 척추인 수출의 일방적 독주체제 그리하여 수출과 내수의 극단적 양극화 성장체제를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경우,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아예 나라경제 거시순환 경로에서 배제된 채, 오지 않는 일자리와 소득을 기다리다 스스로 절멸하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청년 실업이, ‘88만 원 세대’가 큰 문제다. 그렇지만 이미 국내의 경제순환선에서 배제된 6~70대의 고령자가 대량으로 자살의 막바지에 몰림으로써 2004년 이래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최고로 급증하고 있다. 이 사실은 대외시장에 편중된 우리 경제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mechanism of social exclusion)이 이제 그 자체 자생력을 갖고 마치 사회적 암세포처럼 작동하는 거대한 자살기계체(suicide-machinism)로 역진화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시민이, 대량의 현재 시민과 장래 시민이 시장으로부터 배제, 축출되고 진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거대한 잠재적 실업자 대군을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다. 고삐 풀려 질주하는 시장이 그 작동방식의 특성상 시민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좁아짐으로써 시민들이 저절로 시장 밖으로 밀려 추락하는 추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도 각국이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으로 나가면 모두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나라경제에서도 모두 저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이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승자조차 자신의 승리를 축하해 줄 관객이 객석에서 모두 쓰러져 있는 디스토피아에 홀로 남겨졌음을 최후의 순간에야 깨달을 수 있다. 그때는 너무 늦다.

규율 잡힌 공정한 시장의 회복과 생산적 협력,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확충, 이 이중과제가 지금처럼 절실하게 합치되면서 요구되는 경우는 일찍이 한국 현대사에서 없었던 것 같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복지국가란 결코 복지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복지만능국가가 아니다. 복지만으로 고삐 풀린 시장의 야만에 대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이미 세계의 다른 경험들이 잘 보여주지만, 압축 성장의 구조적 모순에 97년 위기 이후 그들이 중첩된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그렇다. 생각해 보라. 한국경제 97년 체제는 수출독주 체제인 동시에 재벌지배체제, 정확히 말해 97년 이전과는 달리 금융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수익지향’ 재벌 독식 지배체제이다. 압축 성장기 이래 면면히 내려오는 뿌리 깊은 재벌 지배체제의 개혁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삼성공화국에서 복지국가로 갈 수 있겠나? 다시 말해 삼성공화국이라는 고도의 무책임 특권과 사회적 배제, 억압 체제에 대해 민주적, 시민적 규율력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국가로, 더불어 사는 공동의 나라로, 민주공화국의 나라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정의란 무엇인가’와 함께 ‘삼성을 생각한다’(김용철)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은 지난 시기 재벌 개혁전선에서 아픈 실패와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요청을 담고 있으며 유사한 시대정신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런데 삼성공화국을 우회하면서 복지국가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쪽은 복지국가론을 복지만능국가론이라고 몰면서 공정경쟁시장이 우선과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묶어놓는다. 오래된 이항 대립이고 혼돈이다. 삼성공화국의 진보적 개혁관문을 돌파할 때 비로소 열릴 공정함 경쟁과 생산적 협력이 결합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그리고 보편적 복지연대 체제, 상호불

가분의 정의와 연대의 이 이중난제를 어떻게, 어떤 힘으로 풀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한국의 구체적 조건 속에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한국적 길에서 중대한 도전이다.

7·28의 냉소적 뜻 : 불감 진보는 보수 반동의 복귀를 도울 수 있다

분명히 7·28 재보궐 선거는 국가급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6·2 시민선택과 판이했다. 6·2 지방선거는 마치 전국선거처럼 치러졌다. 그 반면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철저하게 지방선거처럼 치러졌다. 이 선거의 가장 극적인 승리자가 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통찰은 아주 정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발로 한강을 건너기 전에 한나라당은 여의도에서 단 한 발자욱도 나오지 말라.” 그는 민심을 정확히 읽었고 마치 한나라당의 실세가 아닌 것처럼 90도로 절하고 다녔으며, 그의 지역구 유권자들은 그의 처세에 인간적으로 큰 격려를 보냈다. 이런 처세는 눈 밝은 스님으로부터 ‘뭔가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45도가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그가 자기를 낮추고 나름대로 대중과 자기 방식으로 소통하고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 반면 제1야당의 정치적·시민적 불감증은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이라 할 정도였다. 진보세력이 아무리 진보적 구호를 외치더라도 대한민국 시민은 명확하게 알아챈다. 자기와 다른 이들을 포용할 능력이 없는 자폐적 불감 세력은 그 자체가 반동은 되지 않는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동세력이 돌아오는 것을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다이내믹 코리아의 정치는 다시 6·2에서 7·28로 미끌어져 역주행했다.

뜻으로 본 2010년 : 혼돈의 세계, 복지국가와 공동의 나라라는 도전 앞에서

성장과 개발, 경쟁과 대결 위주에서 복지와 생태, 평화와 연대의 방향으로 우리 삶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치세력도 거부하기 어려운 정치 대세로서 부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위기 이후, 민주화 이후,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컨센서스가 떠오르고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인 일반 서민 대중의 이해가 제도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와 사회 간의 비대칭성은 현대사와 함께 오랜, 대한민국 정치관의 고질적인 약한 고리다. 또한 ‘삼성공화국’이라는 무책임 독식 특권 체제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결정적인 약한 고리이자 실패지점이기도 하다. 역사의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각 시대의 역사적 진행이 드러내는 뜻과 그 뜻을 실현할 조건에 있는 주체가 딱 일치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역사는 비록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부적절하더라도 그 뜻을 눈치챈 다른 정치적 행동체들이 그 뜻을 떠받들고 대항할 수 있음도 가르쳐 준다. 어떤 민주적, 시민정치적 동력과 규율력이, 어떤 연합정치적 전략이, 제도정치와 시민정치 동력을 결합하는 어떤 새로운 지혜가 이 개혁관문들을 통과하게 할까.

또 한 가지 걱정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사실 복지와 분배, 때로는 심지어 평화조차도 꼭 진보세력만이 독점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런 가치와 목표의 실험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기존의 성장 제일주의를 외골수로 추구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터잡은 땅이 꺼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타고 새 땅에 올라갈 수 있다. 단,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탈취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면 반드시 기득권에 손상이 가게 되어 있다. 보수 세력이 그런 손상을 어떤 방식으로 만회할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역사에서 그런 잃었던 기득권의 만회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모두 잘 알다시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로 유명한 영국 노동당적 길, 북구 스웨덴의 사회민주적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미국 루즈벨트적 길도 있다. 이들 경로 간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미국 루즈벨트적 길은 유럽적 길과는 달리 노동당 또는 사회민주당이 없는 경우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복지국가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하여 병행 발전한 유형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와 전혀 다르게 독일 비스마르크적 길이 있다. 지난 서유럽 현대사에서 국가 복지의 실현은 19세기 말 독일제국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진출에 대처하기 위해,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옛과 채찍’을 결합시킨 탁월한 정치 전략과 감각에 의존하여 황제의 온정주의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거기서 상실한 기득권을 보상받기 위해 독일 보수기득권층은 국가민족주의로 계급의식을 국민의식으로 희석시키면서 파국적인 제국주의 전쟁으로 국면을 끌고 갔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이후 다시 파시즘의 길, 우익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세계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시장근본주의와 워싱턴 컨센서스는 죽었다. 그리하여 그것에 기반하거나 그것을 모방 이식한 사유와 이데올로기, 정책 패러다임, 이런저런 각종 변종들도 모두 죽었다. 세계도, 한국도 변해야 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세계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답론도 혼돈에 빠졌다. 과도기의 기괴한 ‘차이나메리카’의 시대에 우리는 묻는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어떤 컨센서스인가? 베이징 컨센서스인가? 아니면 어떤 ‘서울 컨센서스’인가? 97년 이후 10년 시기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이후 다시 박정희 모델의 부활인가? 삼성공화국의 부활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적, 대항적 컨센서스인가?

갈라진 두 개의 대한민국을 갈아엎고 새롭게 복지국가와 공동의 나라, 민주공화국의 우리나라를 일구어야 할 새 땅이 지각 위로 솟아오르는데 동산

위의 해는 언제 뜨는가? 혼돈은 여전하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새 시대 정신을 이끌 진보적 새 정치세력은 아직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위기 이후 세계와 한국에서 역사는 불투명하고 혼돈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海飛波騰日不出

天空星列月不來

바다는 날고 파도는 뛰어오르나 해가 뜨지 않고,
하늘이 비고 별은 늘어섰지만 달이 오지 않는다